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4월 13일(금) 11: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		
자료문의 : 강경성 원전산업정책과장(02-2110-5481), 김영규 서기관(4879), 김건혁 사무관(4880)		

「원전, 더욱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겠습니다」

– 고리 1호기 전력공급중단사건 계기 「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」 수립·발표 –

□ 지식경제부(장관 홍석우)는 국무총리주재 제 113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고리 1호기 전력공급 중단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「원전운영 개선 종합대책」을 확정·발표하였음

○ 금번 종합대책은 지난 2월 9일 발생한 고리1호기 전력공급중단 사건을 계기로 한층 높은 원전 안전성을 확보하고,

○ 원전운영의 투명성과 소통강화를 통해 국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원전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진계획임

□ 금번 대책은 ①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, ②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, ③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강화, ④ 협력업체 역량제고 등 4대 분야 15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음

○ 세부 추진과제는 일본원전사고로 인한 원전에 대한 수용성 악화, 원전고장정지에 대한 국민 관심 증대, 고리1호기 전력상실사건, 납품비리 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도출하였음

□ 첫째로 원전설비의 건전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○ 이를 위해 지경부는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올해 7월까지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

- 이를 통해 운영, 설비, 안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나갈 예정임

- 특히 20년 이상 가동원전 원전(9기)에 대해서는 문제발생 우려 설비를 선별하여 선제적으로 교체를 추진할 계획

○ 이와 함께 원전 설비 건전성 보장의 핵심인 계획예방정비를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점검항목과 기간을 대폭 확대·연장해 나갈 예정임

- 이를 위해 전문가TF 구성·운영을 통해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 한후 공기 조정과 관련 절차서를 올해 10월까지 개정할 계획

○ 또한 신규원전 건설에 적용 예정이던 '최고가치낙찰제'를 기존 원전의 유지보수 등에도 확대 적용하고

○ 한수원의 자기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설비에 대한 정비·검사·시험 등에 대한 한수원 직접 수행 비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

□ 현재 가동정지 중인 고리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제도개선 및 설비보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

○ 원자력안전위원회가 IAEA 특별점검 및 특별점검단 조사(원안위 주관)를 거쳐 설비건전성을 확인한 후 재가동여부를 결정할 예정임

□ 둘째로, 투명성 제고 및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○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기능을 기존 환경안전성 모니터링 위주에서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감시로 대폭 확대하고

- 구성에 있어서도 원전에 대한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시민단체 원전 전문가의 참여를 추진

○ 또한 인적요소 개입없이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가 자동통보되는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고 누락·지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

- 한수원도 본사에 지역본부에 대한 24시간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해 나갈 계획임

○ 이와 함께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원전운영 정보공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·운영할 계획이며,

○ 원전 인근 주민들과의 체계적인 소통추진과 한수원의 지역발전 기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동반발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

<소통강화>

① 한수원 지역본부별 대변인 제도·정기브리핑 실시, ② 원전 주변 정보공개용 전광판 설치, ③ 한수원 경영진 주민대화 상설화 ④ 한수원 본사이전 1년 조기 시행

<지역 동반발전>

① 지역발전 계획 수립 지원, ② 취약계층 고용확대 지원, ③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, ④ 지역행사 참여 확대 및 스킨쉽 강화⑤ 재경장학관 건립 추진, ⑥ 신속 민원 처리, ⑦ 지역주민 자녀 한수원 취업우대 강화, ⑦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개선 추진

□ 세째로,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의 조직문화를 쇄신하고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○ 안전 최우선의 원전 건설·운영 추진을 위해 원전이용율·연속무고장 운전 등 이용율·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목표·지표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로 전환하고

○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쇄신 및 임직원 의식개혁을 추진하고 안전문화 전담조직을 신설할 계획

- 이와 함께 핵심인력인 원전운전원 대상 주기적 인성검사 실시, IAEA 안전문화평가 수검 추진을 통해 조직문화를 쇄신해 나갈 계획

○ 또한, 타성 타파,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자, 고객접점근무자 대상으로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을 확대 시행하고

○ 법무, 홍보 등 주요 보직 대상 외부인재 수혈을 통해 조직의 전문성·개방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○ 이와 함께 납품·구매제도 개선을 통해 청렴도 제고를 유도하고 품질 관리 또한 강화해 나갈 예정

<퇴직자 납품업체 재취업 관리강화>

① 한수원 퇴직자 DB 구축, ② 퇴직자 고용현황 상호공개

<납품계약 감시강화>

① 한수원 납품정보 공개정보사이트 신설, ② 수의계약 요건 강화 및 사유 공개, ③ 내부 및 감시업무관계자 거래 제한 및 현황 공개, ④ 비리신고 HOT라인 설치, ⑤ 기동감찰 전담조직, ⑥ 반부패 시민감시단 운영, ⑦ 부패신고 포상금 신고 및 계약 정밀분석 실시

<구매·검수강화 및 처벌·교육강화>

① 설비관리와 구매관리 분리, ② 기자재 추적관리 시스템 구축, ③ 교차검수 등 검수강화, ④ 징계기준 상향, ⑤ 청렴교육과정 운영 및 사례집 발간

□ 네째로, 한수원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

○ 한수원은 미국이나 프랑스의 해외 유수 원전 운영업체의 선진 운영·관리기법 도입적용을 통해 관리·감독 역량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

-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실시,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강화, 입찰서 적격심사 감점제도 등 기시행중인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임

○ 이와함께 한수원은 협력업체의 질적 역량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강화 방안을 수립·실시해 나갈 계획

○ 이러한 한수원 및 협력업체의 역량제고방안과 함께 한수원 납품 신규업체 진입 확대를 통한 품질향상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

□ 금일 확정한 종합개선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경부는 이행점검 TF를 구성하고 매달 정기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10월경 총리주재 회의에 점검결과를 보고할 예정

○ 한수원 사장은 지역순회 보고회를 통해 원전주변지역민들에게 종합이행상황을 상세히 알려드릴 계획이며

○ 정부는 개선종합대책 발표 이후 발생하는 절차위반, 비리·부정 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실행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예정임

○ 이와 함께 원전의 필요성·안전성과 원전 안전운영 종합대책에 대한 일반국민·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

붙임 : 4대 분야 15개 세부추진과제

붙임 **4대분야 15개 세부추진과제**

1 원전설비 건전성 강화

◈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, 계획예방정비 개선, 최고가치낙찰제도 확대 적용을 통해 근본적인 원전설비 건전성을 확보

◈ 원전설비 관리에 대한 사업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최고 수준의 원전 품질유지를 위한 관리 환경을 조성

1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 실시

○ 에너지 시설 안전점검 민관합동위원회(원전분과)를 통해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 실시(4월~7월)

- 국내 원전설비의 운영 및 유지·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운영, 설비, 안전 등 각 분야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

* 최근 보령화력발전소·프랑스 원전 화재 발생 감안 화재방호체계도 점검항목에 포함

○ 특히 20년 이상 원전(21기중 9기)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문제발생 우려설비의 선제적인 조기 교체 등 설비투자 확대(4월)

- 취약설비 선정(5월) 및 소요예산, 교체시기 등 조치계획 수립(6월)

* 20년 이상 가동 원전 : 고리#1~4, 영광#1~2, 월성#1, 울진#1~2

○ 외부전문가 입회하에 디젤발전기 성능시험 시행중(총 50대, 3.19~4.20)

2 계획예방정비 공정 전면 재검토 및 기간 연장

○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도록 계획예방정비 점검항목 확대 및 기간 연장 추진(10월)

- (주요 점검항목) 50개 → 100개 수준, (기간) 20~30일 → 35~45일 수준

○ 전문가 T/F 운영을 통해 계획예방정비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노형별 표준공기 조정 및 관련 절차서 개정(10월)

3 최고가치낙찰제 확대 적용

○ 신규건설원전에만 적용예정*이던 최고가치낙찰제를 기존 원전유지보수(O&M : Operation & Maintenance)에도 확대 적용

* '13년 발주예정인 신고리 5,6호기 주설비 공사부터 최고가치 낙찰제 적용 예정
** 유지보수부분 최고가치낙찰제 적용분야 검토(5월) → 세부규정 마련 시행(6월)

4 원전사업자의 자기책임성 강화

○ 위탁업체의 인적오류, 작업결함 등으로 인한 발전정지, 성능저하 방지를 위해 핵심설비*에 대한 한수원의 직접 정비·검사·시험을 확대(10월)

* 보호계전기, 비상디젤발전기 종합성능시험, 전자카드 정밀진단, 격납용기 종합누설률 시험, 계획예방정비 리스크 관리, 설계검증 등

- 검사의 경우 핵심설비(원자로설비, 터빈발전기) 일부에 대해 한수원 직접검사 체계로 전환 검토

○ 한수원 자기책임성 강화차원에서 위탁업체 활용 작업수행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한수원 직접 수행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

* 한수원의 및 감독소홀 및 관리 미숙에 대한 책임 부과

< 고리1호기 설비 건전성 향상 및 재가동 검토계획 >

- 우선,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방지대책(3.21)에 따라 제도 개선 및 설비보완*을 차질없이 추진(4대분야 20개 항목)

* ①비상디젤발전기 기동용 공기공급밸브 이중화(4월), ②비상전력 공급용 이동형 디젤발전기 추가 배치 (4월), ③비상디젤발전기 신품 교체 및 용량 증대 ('13. 3월), ④자연재해 대비 송전선로 증설(2→6회선, '13. 9월)

-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특별점검단 조사를 거쳐 설비건전성을 확인하고 IAEA 특별점검(지경부 주관) 결과를 종합하여 재가동여부 결정

2 투명성 제고 및 소통 강화

◈ 민간환경감시기구 기능강화, 원전운영정보의 상세한 대국민 공개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지역과의 소통강화·동반발전사업 추진

1 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구성 및 감시기능 강화

○ 민간환경감시기구의 감시기능 대폭 확대·강화(4~6월)

구 분	현 재	개 선
구 성	관할 지자체장, 주민대표 중심	시민단체, 원전전문가 참여
기 능	주변지역 방사성 측정 등 환경 안전성 모니터링 위주	고장 등 원전운영에 대한 감시

* 강화방향 : ① 감시기구 기능강화 및 명확화 , ② 원전 출입절차 완화, ③ 정보접근성 제고, ④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, ⑤ 검사장비 확충

2 원전 이상 자동통보 시스템 구축 및 한수원 자체 감시기능 강화

○ 인적요소 개입 없이 실시간으로 발전소 이상상태가 통보(감독기관·민간환경감시기구·지자체·홈페이지)되어 보고 누락·지연을 근본적으로 차단

* 보고사항 발생 시 자동으로 통보하는 경보체계 개발(12월)

○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4개 지역 원전본부별 안전감시역·안전담당관 신설 운영(4월) 및 한수원 본사에 24시간 운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

3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원전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

○ 원전운영 현황공개 전용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·운영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발전소 운영상황을 공개(1단계 4월, 최종 7월)

* 공개방향 : 보안, 영업비밀을 제외한 전 영역에 대해 쉬운용어로 공개

4 원전주변지역과의 소통강화 및 동반발전 추진

○ 원전인근 주민들과의 체계적인 소통추진과 지역발전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과의 융화 및 동반발전을 도모(상세추진계획 참고 1, 2참조)

* 지경부 장관 부산·기장 방문(3.23, 부산시장 등 지자체장 면담, 주민간담회) 이후 후속방문(간담회)·업무협의 실시(에너지자원실장·원전산업정책관, 4. 9~.10)

참고 1 원전주변지역-한수원간 소통강화 방안

□ 원전지역 주민과의 소통 확대·강화

○ 지역언론과 지역주민들에게 원전운영 상황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기 위한 지역본부별 대변인 제도 도입

○ 원전건설·운영 정보, 주민 관심사항 등 원전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브리핑 제도 도입(매월)

○ 원전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지역주민 대상 정보 공개용 전광판 설치·운영

○ 지역발전 및 각종 민원에 대한 해결과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한수원 사장(경영진)과의 직접대화 상설화(분기별)

- 원전본부별 자체 주민 설명회도 수시 개최

* 全 자매마을(287개) 직접 방문(4월) 및 첫 정례브리핑 실시(2/4분기)

□ 한수원 본사이전 1년 조기 시행(13년 말 완료)

○ 한수원은 본사사옥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, 기존계획('14년말)을 1년 앞당겨 2013년 말까지 이전 완료

- 금년중 본사인원 200~300여명을 경주시로 조기 배치

- 한수원 사옥 건축일정을 감안하여 건물임대활용 본사이전 추진

* 최근 경주시내 한수원 본사이전관련 논란 종식으로 한수원 본사 이전 환경이 조성

** ①현상설계 공모 및 기본설계 확정('12.2~'12.5), ②본사사옥 건설 착수 기념식('12.6), ③건축공사('13.1~'15.12)

○ 금년중 한수원 본사 이전 기념행사(착수기념식) 개최 추진('12.6)

참고 2 원전주변지역-한수원간 동반발전 추진방향

□ 지역발전 적극 동참

○ 원전건설계획과 연계한 지역개발 및 발전계획(지역개발 청사진) 수립시 적극 협조·지원

* 한수원이 발전계획 수립 용역사업비 지원 및 전문인력 참여 지원 추진

- 원전 마이스터고 유치 등 지역 교육환경 개선 및 원전관련 직업교육 등 취약계층 고용확대 적극지원

* 글로벌 원전기능인력 양성사업 확대 등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

○ 한수원 사회봉사단 활동 등 주민 체감형 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민 수혜사업인 「사회적 기업 육성」에 적극 동참

○ 지역민과의 유대감 강화 및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

- 1부서 1자매마을 활동 강화, 한수원 직원의 지역 봉사활동 강화 및 지역행사 적극 참여 및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

- 소규모 사택의 지역내 건립 등 지역주민과의 융화 적극 추진

□ 지역민 눈높이에 맞춘 사업 추진

○ 원전지역 주민 자긍심 제고 및 지역출신 유학생 편의제공을 위한 재경장학관(기숙사 시설 500여명 수용 규모) 건립 추진

○ 민원 해소에 법제도적 문제가 없고 주민 편의와 관련된 사안의 경우 중간보상, 조기 용역착수 등을 통해 신속한 해결 추진

* 예시 : 길천마을 집단 이주대책 마련 등

○ 지역민들의 지역출신 인재의 한수원 취업 확대요구를 감안하여 원전소재 지역 주민(자녀) 대상 한수원 취업우대 조항 강화 검토

○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주민 직접혜택 사업비중 확대 추진

* 지역민 직접지원 확대를 위한 발주법 개정TF(주민대표·지자체·지경부·한수원) 구성·운영을 통한 개선안 도출 및 개정추진(4월~)

3 한수원 조직문화 쇄신 및 역량 강화

◈ 안전 최우선의 원전운영 목표·지표를 설정하고 조직문화 쇄신을 위해 납품제도를 포함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

1 안전 최우선에 기반한 원전운영 목표·지표 설정

○ 현재 이용율·효율성 중심의 원전 운영 목표·지표(원전이용율·연속무고장 운전 등)를 원전안전 및 비상상황대처 관련지표로 대체

* 과도한 원전이용율 설정 지양, 연속무고장운전 연계 한수원내 포상·기념제도 폐지

** 원전 안전 및 비상상황 대처능력 평가지표 개발(5월)→안전성 관련 지표 가중치 강화 및 달성목표 상향 조정(5월)→경영평가지표 반영(9월, 관계부처 협의 추진)

2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쇄신 및 임직원 의식개혁

○ 원전 운전원(호기당 60명) 대상 주기적 인성검사 실시,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조직문화 개선 종합계획 수립 및 안전문화 전담조직 신설·운영(6월)

○ IAEA 안전문화평가(SCART:Safety Culture Assessment Review Team) 수검(13년)

○ 조직단위별 의식개혁 캠페이너 선정 및 전문교육 실시, 캠페이너 주도 내부커뮤니케이션 활성화, 전문가 코칭교육 등 실시

3 순환보직 확대 및 외부인재 영입을 통한 조직건전성 강화

○ 타성 타파, 부조리 예방을 위해 장기근무자, 고객접점근무자 대상 순환보직 및 인사이동 확대 시행

* 처·실장, 사업소장, 팀장급(3월 기시행), 차장급 이하(4~5월)

○ 법무, 홍보 등 주요 보직대상 인재 외부수혈로 조직전문성·개방성 강화

* 법무팀장(검사 출신), 언론특보(현직기자 출신) 및 대변인 채용 등

4 납품·구매제도 개선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

○ 계약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조직청렴도 제고 및 우수한 품질의 공사·물품제조구매·용역의 활용 확대추진(상세내용 참고 3참조)

참고 3 납품구매제도 개선방안

□ 한수원 퇴직자 납품업체 재취업 관리 강화

○ 공정한 납품 경쟁 및 계약환경 조성을 위해 한수원 퇴직자 DB를 구축·관리하고, 계약 입찰 참여업체의 한수원 퇴직자 영입현황 한수원 제출 의무화, 입찰업체간 상호공개, 평가반영 추진

* 협력업체 대상 퇴직자 채용자제 요청 공문발송

□ 한수원 납품계약 감시기능 강화

○ 한수원 납품계약 정보공개 사이트 신규구축을 통해 건전한 상호견제를 유도하고 수의계약 요건 강화 및 수의계약 사유 공개의무화 (5월)

* 업체 영업기밀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(입찰조건 및 낙찰결과)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공개

○ 한수원 직원, 관리·감독 기관(지자체·민간환경감시기구) 종사자(친인척 포함)대상 한수원과의 거래 금지·제한, 거래현황 공개 및 비리감시 활용

* 면밀한 법률검토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 및 범위 등을 확정(~6월)

○ 24시간 비리신고 지식경제부 Hot Line(전화) 개설 및 납품계약 정보 공개 사이트를 활용한 비위 사항 실시간 직접 접수·처리 체계구축

* 내·외부 신고자 ↔ 지경부 감사관실, 한수원 감사실(전화메일비공개 게시판 활용)

○ 한수원내 기동감찰 전담조직을 적극가동하여 계약현황 분석, 상시모니터링, 제보, 탐문 등 비위 적발에 대한 연중 암행감찰 실시 (4월~)

* 한수원 감사 직속의 상설적 기동감찰팀(검사출신 팀장 1명 영입, 팀원 9명) 신설완료

○ NGO, 지역인사로 구성된 지역원전 본부별 '반부패 시민감시단' 운영

* 지역원전본부별 5명 구성, 정기 및 수시회의를 통한 동향 파악, 특이동향 또는 의심 정보 수집시 사실관계 확인 등 신속 대응방안 강구

○ 비위제보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, 부정의심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 도입을 통한 납품·용역 비리근절 대책 실시

◇ 한수원 납품계약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신설 및 강화방안(예시)

① (포상금 지급) 담합 또는 비리신고자 포상금(예시 : 기본포상금 + [한수원 손실액-5억원] × 0.3, 또는 5억원 한도) 지급

* 포상금은 구상권 실시를 통해 확보한 재원 한도내 지급

② (계약 정밀분석) 특정금액 이상, 부정의심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·운영하고 대상계약에 대한 분석·대응조치 실시

* 특정업체 연속 수주 → 경쟁업체 간담회 실시 및 기술·납품기준 변경 소요검토

** 소수업체 순환 수주 → 일정 패턴 반복시 지속적인 단가 인하 검토

□ 한수원 구매업무 이원화 및 납품자재 검수 강화

○ 기존 설비관리부서의 구매업무를 설비관리와 구매관리로 이원화

* (설비관리) 소요판단, 소요량 산정, 기자재 검수, (구매관리)규격서 작성, 가격 산정, 구매요청, 검수참여

○ 기자재별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추적관리가 가능한 IT시스템 구축 (6월)

○ 구매시방서에 상세검수 항목 사전 명시와 자재청구자의 검수금지 원칙 명문화 및 타부서의 교차검수 입회 (4월)

□ 징계기준 강화를 통한 엄정한 처벌기준 확립 및 교육강화

○ 비리행위 대상 및 징계기준을 명확히 하고 엄격히 적용

* 협력사 업무유착 금지조항 신설, 재취업·향응·친인척 취업 등 甲의 지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 사례 예시 등을 원전종사자 청렴기준인 '임직원행동강령'에 구체적으로 명시(5월

○ 협력업체 직원 대상 청렴교육 과정 운영 및 청렴·비리행위 사례집 발간

4 협력업체 역량제고

◈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한수원의 자체 관리감독 역량 강화

◈ 협력사 보유역량에 기반한 협력업체 평가 및 교육내실화를 추진하고 신규 협력업체 진입 촉진을 통한 품질향상 추진

1 협력업체 관리·감독 강화

○ 해외 유수의 원전 운영업체*의 선진 운영·관리기법 도입적용을 통해 작업절차 준수 및 품질 제고를 위한 관리·감독 역량 제고

* 미국 엑셀론(exelon)사, 프랑스 국영전력공사(EDF) 등

○ 기발표('12.2.9) 시행중*인 협력업체 관리감독 강화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협력업체 인적실수 사전예방 및 작업품질 관리 강화

* 발전정지 유발시 삼진아웃제 실시, 계약서 손해배상 청구조항 강화, 입찰서 적격심사 감점제도 도입 등('11년 8월 부터 적용 중)

2 협력업체 역량평가 및 교육 내실화

○ 전문인력 확보, 사업수행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협력업체 질적 역량평가를 통해 단계별 교육강화 방안 수립·실시

* 협력업체 교육강화 및 상시 셀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, 협력업체 CEO/경영진 KINS 안전학교 등 품질·안전교육 수강 추진

** '원전 종합정비 훈련센터' 운영으로 맞춤형 전문가 육성(훈련동 신축 기본계획 수립 및 부지확보(12월), 건물신축(3년))

3 신규업체 진입확대를 통한 품질향상 촉진

○ 한수원 등록업체 중 납품 및 용역수행 실적이 전무한 업체참여 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업체선정 제도 개선사항 도출·시정

* 한수원 등록업체(811개) 중 10억원 이상계약 신규 진입업체 전무('11년 기준)

○ 신규납품·용역업체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국산화 개발사업 확대하고 신규업체 진입 활성화를 위한 입찰제도개선 및 감독강화

* 지경부 내 「원전운영제도개선전문위원회」 구성·운영(4월~)